

보도시점 2024. 1. 10.(수) 9:10 (2024. 1. 10.(수) 석간)

[2024년 고용노동부 정책 돋보기]

'23년 연간 고용률 · 실업률 모두 역대 최고 · 최저

- '24년에도 양호한 고용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청년 · 여성 ·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집중 추진

고령층 및 저소득 취약계층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조기채용 추진에 따라 연초부터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생계를 위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년은 보다 다양해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고교생 및 대학생은 진로 설계부터 취업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월 10일(수)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제13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① **'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12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p 증가한 6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청년 고용률(46.0%)은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 고용 둔화세가 지속되었던 40대 고용률(79.0%)도 여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2%p 상승하였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5만명 증가하는 등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보건복지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취업자 수도 12개월 만에 증가하였다. 다만,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다. '23년 전체를 보면 고용률(62.6%), 경제활동참가율(64.3%), 실업률(2.7%)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 최저를 기록하였고, 취업자 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15~64세, △27.8만명)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업 및 숙박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하며 연간 32.7만명 증가하였다.

② '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 '24년 자치단체 참여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 신속집행 등 추진계획: 올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조업 수출 중심 경기개선에 따른 고용회복 시차,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등 올해 상반기 지역에서 체감하는 고용상황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참여 중앙정부 일자리사업(16개 사업, 국비 5,324억원)을 상반기 전년 대비 10%p 이상 신속 집행하도록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향후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희 차관은 “주요기관에서는 올해도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나, 최근 제조업 고용회복 지연 등의 고용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일자리 전담반(TF)」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수급대책과	책임자	과 장	김준호 (044-202-7962)
		담당자	서기관	이민진 (044-202-7214)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책임자	과 장	황인웅 (044-215-8510)
		담당자	서기관	이지은 (044-215-8511)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시동 (044-215-8530)
		담당자	사무관	박성준 (044-215-8531)
	사무관		김범석 (044-215-8533)	

-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께 보다 나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 오늘 발표된 「'23년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p 증가한 6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취업자 수는 28.5만명 증가하는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연령별로는 전 연령의 고용률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거나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청년(46.0%)은 2개월 연속 고용률이 상승하였고, 40대(79.0%)는 여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고용률이 상승(1.2%p)하였습니다.
 - 업종별로 보면 보건복지업,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도 12개월 만에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고용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고용률 중심으로 고용지표를 점검하고,
 - 업종별로 고용상황과 여건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업종별 대응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금년에는 수출 회복 등으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비교적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주요 기관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기관별 취업자 수 증감 전망(만명, '23→'24): KDI(32→21), 한국은행(34→24), 노동연(33→26), 정부(32→23),
 - 다만, 수출 회복 등에 따른 경제의 온기가 노동시장으로 전달되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고물가·고금리와 함께, 최근에는 건설경기 둔화 등의 고용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일자리 TF」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그럼, 제13차 일자리 TF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금일 회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① 「'23년 12월 고용동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와 함께, ② 「'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과 ③ 「'24년 자치단체 참여 중앙정부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합니다.
 - 올해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동개혁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우선, 노사법치를 확고히 하여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통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또한, 산업·인구 등 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정부 일자리사업도 건전재정 기조 하에 이와 같은 정책과제를 반영하여, 미래 성장과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우선, 청년·여성·중장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청년의 경우,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또한,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 맞돌봄을 확산*하고, 경력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육아휴직 기간: 부모 공동 육아휴직(3개월 이상) 시 6개월 연장(1년→1년6개월)
6+6 부모육아휴직제: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450만원(18개월내 부모 동시·순차)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녀연령 만 8세 → 만 12세, 기간: 최대 24개월 → 36개월

- 아울러, 역량 있는 중장년이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이·전직 지원을 위한 중장년 내일센터를 확충(31 → 34개)하겠습니다.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확대(2 → 3년)

- 이와 함께,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해 민간의 자율적 협력에 기반한 「조선업 상생협약」을 他업종·지역으로 확산하고, 정부는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업종별 상생협약 패키지 지원(148억원, 신설), 지역단위 이중구조 개선(41억원, 신설) 등

- 또한, 기업과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유연근무장려금(96억, 중소기업 육아기 시차 출퇴근제 지원 신설), 워라밸일자리장려금(339억원, +43억원)

-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일자리 매칭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 구인난 대응 플러스사업(408억, +60억),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499억, 신설)

- 정부는 이와 같은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 특히,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이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 아울러,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올해 상반기 자치단체 참여 일자리사업을 전년 대비 10%p 이상 신속집행되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